# 6,058억원과

최근 결산시즌을 맞아 각기업의 지난해 경영실적이 신문지상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자기가 종사하는 부문의 경영실적에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두가지의 대조적인 수치가 눈길을 끌었다. 6,058억원과 1,283억원—. 이것은 지난해 한국전력과 정유5사가 시현한 당기순이익규모다.

1개 단위기업의 순이익이 매출액 7조7천억원 규모의 정유 5개사의 순익의 5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도 이같이 엄청난 한전의 순이익규모가 전년보다 20.9%가 줄어든 것이라 하니 역시 한전은 「공룡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유사들의 수익규모는 점차 왜소해지고 있는데 같은 에너지기업인 한전이 이렇게 계속 호황을 구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국영기업이기 때문일까. 발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이같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유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증설·시설고도화·장거리 송유관건설에만도 2조5천억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정유사에 허용되는 이익규모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에 정유사들이 조금만 이익을 올려도 「정유사 떼돈 벌어」「정유업계 폭리」등의 표현으로 질타해온 매스컴들이 이런 사실에 관대(?)한 것은 뉴스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일까.

흔히 석유산업을 가리켜 「땅짚고 헤엄치기」「절대로 망하지 않는 장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경영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이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83~'88년중 정유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3%로 국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뒤지며, 매출액이익률은 고작 0.8%로서 국내의 타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타정유사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저조한 이익률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이익규제에 있다. 정부는 현재 석유류제품의 최고가격을 결정, 고시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허용이익을 세후 10%로 제한, 업계의 실현이익이 허용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석유사업기금을 통해 이를 환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발생된 정제비 및 판매비 일부를 연말정산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실현이익은 정부의 허용이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허용이익 수준은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상법상의 법정적립금을 위한 수준에도 미달할뿐 아니라 재투자재원은 전혀 확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기업이 재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이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유산업은 석유수요 증가와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능력의 확대와 시설고도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인 과제이다. 최근의 석유소비 증가 현상은 과거와 같은 단순한 물량증가가 아닌 경질화·저유황화, 가스화 등 구조변화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석유수요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질유분해시설과 탈황시설등 정제시설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시설고도화는 장기적으로 수요의 경질화·저유황화추세와 공급원유의 중질화추세에 대응하기

# 1,283억원

金 乾 洽
〈本誌편집인〉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도 필요하지만, 향후 중·경질 유간의 가격차이가 확대되는 고유가시대에 경제적 원유조달을 위한 선택의 여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도 시설고도화 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문제는 엄청난 투자재원의 확보와 업계의 시설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가관리체계의 개선이다.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한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재원의 확보는 차치하고 회사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이윤조차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정유사의 지난해 평균 이익이 고작 2백56억원에 그치고 있는 결산실적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최근 국내외 석유시장의 여건변화는 기존의 유가체계에 대한 근복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유가관리제도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석유의 원활한 흐름(공급)을 도모하고, 이 결과 석유제품이 적정한 가격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는 국내 석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석유제품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면 석유제품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석유제품의 낮은 가격은 석유소비가 비효율적이며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중요한 에너지정책목표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볼때 걸프전쟁 이후 석유류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언론과 소비자들의 요구는 우리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에너지절약의 목표를 간과한 단순논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목표를 에너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산업 및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철저한 통제가 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이며 특히 앞에서 기술한 석유산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가격관리나 엄격한 이익관리에서 탈피하여 업계 자신의 경영책임하에 자율경쟁을 유도할 때이다.♣

'90년 정유사별 경영실적

| | | 油 公 | 湖 油 | 京 仁 | 雙 龍 | 極 東 (推定) | 計 (推定) |
|---|---|---|---|---|---|---|---|
| 매출액 | 1989 | 25,449 | 20,157 | 4,947 | 6,403 | 4,125 | 61,081 |
| (億원) | 1990 | 31,849 | 24,950 | 6,116 | 8,217 | 6,600 | 77,732 |
| 세전당기순익 | 1989 | 943 | 418 | 70 | 450 | 21 | 1,902 |
| (億원) | 1990 | 519 | 600 | 74 | 390 | △300 | 1,283 |

〈자료〉 동력자원부